

민주당의 공약인 비동의 간음죄 신설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

대법원도 지난해 2월 비동의 간음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곤란하다는 점으로 인하여 입법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강간죄 구성요건에 대한 큰 변동임에도 줄 속으로 입법하면 사회 혼란이 예견되는 만큼, 사회 전반적인 여건이 갖추어진 다음에야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며, 지금 입법을 진행하는 것은 시기상조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4. 3. 27.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재원